



경제발전, 제도개혁, 경쟁질서의 확립

李性燮 (초청연구위원, 숭실대 교수)

경쟁질서 시스템 영역과 비경쟁질서 영역

경제발전 과정을 ‘경쟁질서 시스템 영역의 확장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국민총생산의 성장과정’이나 ‘경제활동의 확장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에 비해 경제발전에 대한 분석적 직관력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정의하기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회·경제활동은 경쟁질서 시스템 영역과 비경쟁질서 영역으로 구분된다.

경쟁질서 시스템 영역의 대표적 활동은 시장경쟁활동인 바, 시장에서는 가격을 매개로 하여 경쟁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에는 가격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쟁질서도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 예가 시험제도이다. 공정하고 명료한 공개적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는 한, 가격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쟁질서도 가격을 매개로 하는 시장질서에 버금가는 경쟁질서 시스템을 조성한다.

한편, 사회·경제활동에는 나이많은 사람에게 위치를 마련해 준다든지, 친소관계나 개인적 친분 또는 조직간의 관계에 의해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는 등 경쟁질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비경쟁질서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경쟁이 대체로 공정·명료·공개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비경쟁질서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바탕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경쟁질서 영역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다만 각각의 사회가 처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느 사회에서는 비경쟁질서 영역이 더

중요한 반면, 다른 사회에서는 경쟁질서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상대적 차이가 존재할 따름이다.

개발도상국의 재산권제도

경쟁질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장구한 시일을 요한다. 경쟁질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탱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끔 경쟁질서에 대한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경쟁질서가 위축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경쟁질서를 뒷받침하는 의식과 제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질서를 뒷받침할 의식과 제도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산권제도가 발달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사회에서의 경제행위에 대한 수익전망은 매우 불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전통적 문화양식, 책임의식의 결여,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부족, 사회·정치적 혼란, 인플레이션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미발달 등이 개발도상국의 재산권제도가 발달되지 못한 원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개발도상국 사회는 경제활동이 위축됨으로써 유휴자원이 많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인력이 많다. 개발도상국 사회에서는 다음 두 가지 점으로 인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

첫째는 풍부한 유휴자원의 존재이다. 설혹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유휴자원이 존재하고 실업율이 높기 때문에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구축효과(驅逐效果)를 가져올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

둘째, 개발도상국 사회에서 재산권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이유는 경제행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은 사회에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발하게 되며,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시장경제에 대한 의식이 계발됨으로써 재산권제도가 보다 명료하게 발달하게 된다.

인플레이션·투기형 성장패턴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행한 1962년부터 19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민간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경쟁질서 시스템이 점차 팽창하여 비경쟁질서 영역을 축소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패턴에 따른 경제성장은 197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지만, 1970년대 말의 격심한 경제·사회 불안정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정부가 수행한 역할의 패턴이나 경제성장의 패턴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그 유형이 서로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인플레이·투기형의 성장패턴을 추구해 왔다. 인플레이·투기형 성장패턴의 특징은 정부가 특혜를 공여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가장 선호되는 특혜는 낮은 금리의 은행금융, 차관, 부실기업 특혜불하 등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자금을 차입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인플레이인 바, 산업자금을 한 곳에 몰아주자니 사회적으로 자금이 항상 부족하였고, 긴축을 강행하면 기업이 무더기 도산할 판이었기 때문에 항상 통화팽창이 이루어져 왔다. 특혜를 받은 기업에게 인플레이는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우선 인플레이로 인해 외부차입의 상환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하락으로 임금부담도 경감되는 반면 제품의 가격은 인플레이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을 사둔 기업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이중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빛이 많을수록 유리한 입장이므로 성공한 기업일수록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일반 가계도 인플레이·투기 패턴에 따르는 경제유형의 행태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적금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한 후 부족한 금액은 은행융자를 얻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장만하는 패턴이 그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30%이상의 저축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플레이·투기형 패턴의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우리 경제는 경쟁질서의 영역을 확장해 왔으나, 더 이상 유희자원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공정·명료·공개적 준칙에 따른 경쟁질서의 확립

문제는 1970년대 후반기의 극심한 불안정으로 인해 이 패턴에 의한 경제확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1980년대 이래로 경쟁질서 시스템 영역은 이러한 형태로는 확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만큼 최대한도로 확장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정부의 개입을 통해 유희자원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경제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역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정부의 인위적 정책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경제를 지배하는 경쟁질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이다. 경쟁질서의 유형을 규정하는 제도의 틀이 인플레이·투기형의 패턴을 낳는 유형으로 부터 공정·명료·공개적인 준칙에 의해서 운용되는 경쟁질서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구축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이것은 거시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인플레이 구조를 불식하고 안정기조를 확보해야 함과

아울러 사회·경제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비경쟁체제가 경쟁질서에 의해 대체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혁의 과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야만 향후 지속적 경제 성장을 보장할 경쟁질서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상학사(1971), 경제학 석사(1973)
New York주립대 경제학 박사(1982)
캐나다 Victoria大 초빙교수(1981~82)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1982~86)

Moscow大 초빙교수(1993)
숭실대학교 무역학과 교수(1986~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1996~현재)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후원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근거 :
 - 법인회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4호
 - 개인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4호
- 회원 가입 문의 : 551-3334~7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